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표면화된 중국의 부상은 세계질서의 지각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력분포의 지각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는 대표적 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질서는 물론 세계질서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지역질서의 형성에 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통상 분야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FTA 다자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대표적 사례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2. 18) 발표자료임.

목 차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재균형정책
3. 미중 경쟁 사이의 한국과 일본
4. FTA의 다자화와 TPP
5. TPP와 미국, 일본, 중국
6. 한국에의 시사점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표면화된 중국의 부상은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을 초래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하드파워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상대적 퇴조를 동시에 표면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하드파워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미국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음.
 - 1990년대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한 IT 산업과 규제 완화로 세력 확장 날개를 달게 된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면하면서 구조적 취약성을 내부로부터 드러낸 것임.
-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퇴조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대두되어 온 중국의 부상과 대비되면서 더욱 두드러짐.
 - IMF는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GDP가 2016년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China Daily, 2011/4/26).
 - 구체적으로 IMF는 2016년 중국의 GDP가 19조 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의 GDP는 18.8조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세계은행은 중국의 GDP가 2030년에야 비로소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라는 다소 보수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World Bank 2012).
 - 중국의 경제력이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제력을 추월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임.
-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인 2010년 중국의 GDP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GDP를 추월했음(Bloomberg, 2010/8/16).
- 글로벌 금융위기는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지탱했던 제도적 장치들과 그 이념적 기반에도 커다란 타격을 가했음.
 -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상징되는 경제개혁정책 패키지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아시아 개도국에 전파하면서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주력한 바 있음.

-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전후 세계질서를 지지하던 미국 중심의 이념과 국제제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것임.
- 중국은 증대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의 신장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
 -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공존 가능성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를 제시하였음.
 -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경쟁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층 가속화되었음(Kurlantzick 2007; Lampton 2005).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재균형정책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 미국의 첫 번째 대응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비한 미국 전력의 증강 또는 재배치를 실행하는 하는 가운데,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경성균형(hard balancing)전략임.
 - 경성균형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의 속도가 경제력 격차 감소 속도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 키스 크레인(Keith Crane) 등의 연구는 2025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5,839억 달러인 반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1,973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Crane et. al. 2005).
 -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할 때, 미중 양국의 군사력 격차 축소는 상당한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격차가 감소하는 속도가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미중 양국의 군사적 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성균형 전략의 근본적 딜레마가 드러남.

궁극적으로 미중 양국의 군사적 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성균형 전략의 근본적 딜레마가 드러남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이념과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연성균형 전략임

-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여정책과 봉쇄정책 사이의 최종 선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성균형 전략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더욱이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성균형전략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연성균형(soft balancing)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임.
- 연성균형전략은 소프트파워의 증강을 통해 자국에 동조하도록 함으로써, 상대국가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제도의 창설 및 확대 발전을 통해 상대국가(target state)를 견제하는 전략을 말함.¹⁾
 -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이념과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연성균형전략임.
 - 미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동아시아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소프트파워를 증대하는 것은 연성균형전략 가운데 소프트파워 전략에 해당함.
 - 미국이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양자 동맹을 강화하고, 이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지역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제도에 기반한 연성균형전략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드파워의 상대적 쇠퇴를 겪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태평양 세력임을 선언함으로써 재균형정책을 공식화하였음 (Remarks by President Obama 2011/11/17).
- 재균형전략의 핵심은 군비 증강 및 동맹 강화와 같은 하드파워의 확대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아키텍처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세계 또는 지역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음.
 - EAS 참여와 TPP 제안 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아키텍처 구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그에 따른 지역질서 구상은 중국의 지역질서 구상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미국이 제도에 기반한 연성균형전략을 추진한 것은 중국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Chye 2012).

- 미국은 재균형 정책을 통해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을 연결하는 것을 강조해왔음 (Sahashi 2012/11/6).
- 한미 FTA와 TPP는 미국 재균형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은 재균형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제도적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한미 FTA와 TPP는 미국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

3. 미중 경쟁 사이의 한국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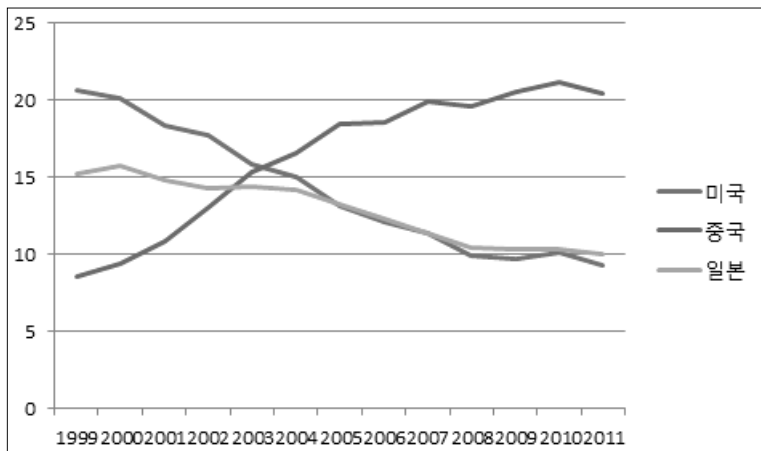
-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지역질서에 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중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ASEAN+3(APT)가 동아시아 지역질서 형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펼친 것이나, 한국과 일본에 앞서 ASEAN과의 FTA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도 이러한 맥락임.
-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APT를 중심으로 형성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
 - 양국이 APT를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도 이러한 우려의 일단을 드러낸 것임.
- 특히 한국과 일본은 한미 FTA와 TPP를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호응한 측면이 있음.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의 핵심은 역외협력의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임.
 - 일본이 지역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 중국이 선호하는 APT를 확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로 전환하려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정책적 목표는 상이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성균형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정책적 목표는 상이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성균형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반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 중국
경제의존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와 같은 제도에 중국을 끌어들여 견제하는 것이 대표적 연성균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비록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신아시아 외교를 표방하고, 하토야마 정부가 우애에 기반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창한 것이 여기에 해당함(Hatoyama 2009).
-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반응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컸기 때문임.
-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산물 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제도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하였기 때문임.
 -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의 결정적 이해관계는 침해하지 않는 양면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대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만과의 FTA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이를 대변함(Mochizuki 2009).
-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반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 중국 경제의존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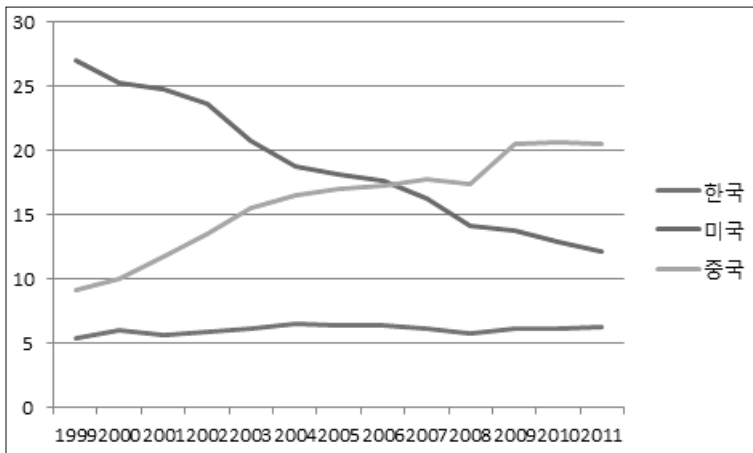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비중 변화, 1999~2011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 위기 이전인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2007년 22.1%에서 2011년 24.2%까지 증가했음.
 -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의 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 이러한 추세는 일본에서도 발견됨(<그림 2> 참조).
 - 1999년 약 9%에 불과했던 중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를 상회하고 있음.

<그림 2> 일본의 주요 교역 상대국, 1999~2011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 중국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한국과 일본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임.
 - 한국과 일본은 수출, 특히 대 중국 수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 중국 의존도의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
 - 하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위협 요인임.
 - 한국과 일본은 점증하는 대 중국 경제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한미 FTA와 TPP는 대 중국 의존도의 증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 것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 중국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한국과 일본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임**

FTA의 다자화는 비회원국들에게도 비차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거나 ‘범지역적’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TPP는 기존 FTA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된 사례에 해당함

4. FTA의 다자화와 TPP

-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다양한 형태로 기존 양자 간 FTA를 다자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FTA의 다자화는 다수의 FTA의 중복적 체결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될 때 시도됨.
 - 생산 공정의 각 단계를 다수의 국가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제한적인 원산지규정은 가치사슬을 최적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기존 FTA의 차별적 규정을 제거 또는 완화하도록 로비를 하게 됨(Baldwin 2006).
 - 초국적기업의 로비에 직면한 정부는 FTA 다자화를 추구하게 됨.
- 동아시아의 경우, 2000년 이후 다수의 FTA가 중복적으로 체결되면서, ‘누들볼(noodle bowl)’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누들볼 효과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기업 비용을 상승시키고, 보호주의를 촉진하며, 복잡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초래한다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은 기존 FTA 협정들을 다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동기를 갖게 되었음(Ravenhill 2009).
- FTA의 다자화는 비회원국들에게도 비차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거나 ‘범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TPP는 기존 FTA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된 사례에 해당함.
 - TPP를 통해 역내 무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TPP를 누들볼 효과의 차단보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Auslin 2012).
 - TPP를 보다 광범위한 FTAAP의 전 단계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 역시 이러한 고려가 작용한 것임.
- 협상 참가국들은 TPP를 통해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음.
 - 상품 무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양허하며,

그 외 원산지 규정, 무역 원활화, 동식물 검역, 무역구제 조치,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투자, 환경, 노동, 분쟁 해결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고 있음.

5. TPP와 미국, 일본, 중국

-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미국을 연결해주는 고리일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동경에서 행해진 연설에서 “TPP가 광범위한 멤버십과 21세기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참여를 다시 한 번 요구했음 (Remarks by President Barak Obama at Suntory Hall 2009/11/14).
-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본 노다 총리는 APEC 정상회의 불과 하루 전인 2011년 11월 1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명분으로 TPP 협상 참여의사를 공식 표명했음.
 - 캐나다와 멕시코도 일본의 뒤를 이어 협상 참여 선언을 하였음.
- 일본의 TPP 참여 선언은 다음의 의미를 가짐.
 - TPP 협상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개혁을 위한 동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FTA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었음.
 -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고품질(high quality) FTA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이 그동안 체결한 어떤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노다 총리의 TPP 참여 결정에 앞서, 2010년 10월 초 당시 칸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임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칸 총리는 기존 양자 간 FTA에 더하여 EU, 한국, 오스트레일리아와의 FTA 및 TPP 추진이 ‘제3의 개국’이 될 것이라고 설파함으로써 TP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본의 기대를 나타낸 바 있음(菅内閣總理大臣 年頭所感 2011).
- 일본은 TPP 이전에도 다양한 수준의 다자 FTA 협상에 관심을 표명하였음.
 - 2010년 일본 각의가 오스트레일리아와의 FTA 협상과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중일 FTA, 동아시아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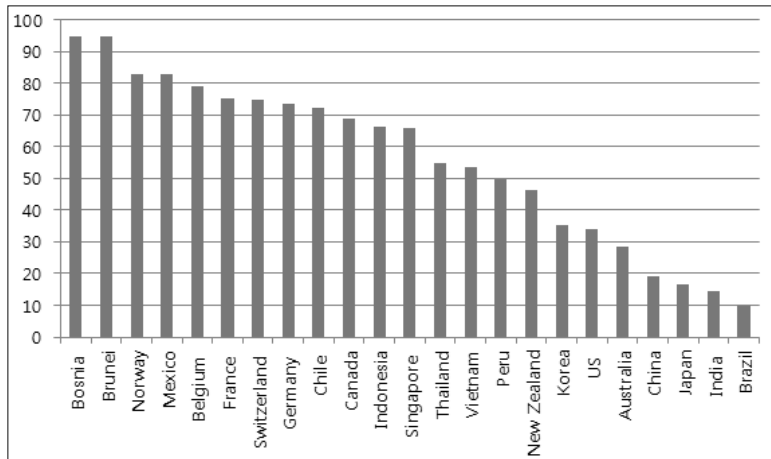
일본의 TPP 참여 선언 관련, TPP 협상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개혁을 위한 동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FTA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었음

다수의 국가들과 광범위한 자유화를 지향하는 TPP는 일본이 뒤쳐진 FTA 경쟁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쟁국들을 추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였음

무역권구상(EAFTA), 동아시아포괄적경제연휴구상(CEPEA) 등 다양한 수준의 FTA를 동시 추진할 것임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閣議決定 2010).

- 다수의 국가들과 광범위한 자유화를 지향하는 TPP는 일본이 뒤쳐진 FTA 경쟁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쟁국들을 추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였음.
 - 일본 정부는 수준 높은 무역 자유화에 대한 국내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주요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지 못하였음.
 - 일본 FTA 교역의 비중은 17.6%에 불과하며, 이는 유럽 국가들은 물론 한국, 미국, 중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그림 3> 참조).
 - 국내정치적 여건 때문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를 추진하지 못한 결과 일본은 경쟁국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임.

〈그림 3〉 주요국들의 FTA 교역 비중



출처: Institute of International Trade, Korea (2011).

- 일본 정부는 TPP가 실현될 경우, 경제적 활력이 가장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권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지며, 이는 일본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아시아의 부를 창출하고, 이를 일본의 고용과 혁신에 연결시키고, 이러한 성과가 다시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아소 총리는 2009년 4월 아시아의 경제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Asian Growth Initiative’를 발표한 바 있음.²⁾
- TPP는 높은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경제적 쟁점이지만, 향후 아시아 지역 아키텍처의 형성과 관련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음.
 -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반응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한다는 대 중국 전략의 의미를 가짐.
 - TPP는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재균형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징적 의미까지 갖게 되었음.
 - 노다 총리의 TPP 참여 선언은 미국으로부터 “미일동맹이 일본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Washington Post 2012/4/19).
 - 이는 하토야마 정부와 칸 나오토(菅直人) 정부에서 경색되었던 미일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음.
- 일본의 TPP 참여 선언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고조시켰음.
 - 중국이 TPP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현재 까지 체결한 FTA의 무역 자유화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며, 향후에도 TPP가 지향하는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임.
- 중국은 TPP가 ASEAN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지역 아키텍처 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일본의 TPP 참여 선언에 대해 위젠화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즉각적으로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TPP에 초대받지 못했으며,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중국 상무부 장관 첸 드밍 역시 일본의 TPP 참여가 동아시아의 다른 형태의 협력의 진전에 영향을 준다면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신 “일본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FTA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orbes, 2012/7/3).
 - 중국은 TPP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배제한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의 디딤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일본의 TPP 참가 선언은 중국의 기존 지역전략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

TPP는 높은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경제적 쟁점이지만, 향후 아시아 지역 아키텍처의 형성과 관련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음

**한국은 지금까지 FTA
허브 전략의 성과를
기반으로 FTA의
다자화 추세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한중일 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했음.
- 중국은 또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ASEAN+3 FTA에 대한 선호를 고수하지 않고, ASEAN+6 FTA에도 반응을 보이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음.
- 중국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16개국 간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추진에 동조하는 변화를 보였음(South China Morning Post 7 November 2012).
- 이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ASEAN+3의 틀을 고수하기보다 TPP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의 이러한 입장 전환은 미국이 제외된 어떤 형태의 지역협정도 좋다(anything without the US)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한 측면이 있음.

6.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 정부는 양자 FTA에 기반한 FTA 허브 전략을 추구해왔음.
 -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한미 FTA는 중국이 한중 FTA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촉구하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한 것도 이러한 맥락임.
 - 한중 FTA 협상의 개시는 한일 FTA 협상의 재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되리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대임.
- 한국은 지금까지 FTA 허브 전략의 성과를 기반으로 FTA의 다자화 추세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FTA 허브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의 다자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음.
 - 한국이 TPP 9개국 가운데 7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것이나, TPP의 무역 자유화 수준도 한미 FTA의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뒷받침함.
 - RCEP이나 한중일 FTA에 대해 적극적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FTA 허브 전략 이후의 새로운 FTA의 전략적 구상을 준비해야 할 것임.
- FTA의 다자화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FTA에 기반한 허브 전략은 한계가 분명함.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박혜연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이승주

現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정치학과 교수,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하였음. 최근 연구업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책임편집),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 (공편),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 (공편) 등이 있음.

주석

- 1) 미국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연성균형 전략에 대해서는 Pape 2005; Paul 2005 참조.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성균형 전략에 대해서는 Pempel 2010 참조.
- 2) 이 계획에는 이를 위해 범지역적인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개발과 같은 ASEAN의 발전과 통합을 촉진하는 “comprehensive Asian development plan”과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는 두 가지 차원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Aso 2009).

참고문헌

- 菅内閣總理大臣 年頭所感. 2011. <http://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101/01nentuhou.html>.
- Auslin, Michael. 2012. "Getting It Right: Japan and Trans-Pacific Partnership, *Asia-Pacific Review* 19(1): 21-36.
- "Can Japan make the tough decisions?" *Washington Post*, 2012/4/19.
- China Daily*. 2011/4/26. http://www.chinadaily.com.cn/bizchina/2011-04/26/content_12396645.htm.
- "China Overtakes Japan as World's Second-Biggest Economy." 2010/8/16. *Bloomberg*, <http://www.bloomberg.com/news/2010-08-16/china-economy-passes-japan-s-in-second-quarter-capping-three-decade-rise.html>.
- "China set for East Asia trade bloc talks to stymie US." *South China Morning Post*, 7 November 2012.
- "China, TPP, and Japan's Future in Asia." *Forbes*, 2012/7/3.
- Chye, Tan Seng. 2012. "Changing Global Landscape and Enhanced US Engagement with Asia: Challenges and Emerging Trends." *Asia-Pacific Review* 19(1): 108-129.
-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 Kurlantzick, Joshua. 2007. *Charm Offens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avenhill, John. 2009. Extending the TPP: The Political Economy of Multilateralization in Asia. Paper for Asia Pacific Trade Economists' Conference ARTNeT,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2-3 November.
- Remarks by Presiden Barak Obama at Suntory Hall, Tokyo, Japan. November 14, 2009. www.whitehouse.gov.
- Sahashi, Ryo. November 6th, 2012. "Is Japan making the most of the US pivot?" <http://www.eastasiaforum.org/2012/11/06/is-japan-making-the-most-of-the-us-piv>.
- "TPP would bankrupt medium-scale rice farmers, says study." *Asahi Shinbun*, February 29, 2012. <http://ajw.asahi.com/article/economy/AJ201202290048>.
- The World Bank. 2012.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JPI정책포럼 현황

- 박종철 『재중·재일 조선인 귀국자와 화교를 통해서 본 북한사회』
(No. 2012-17)
- 이규창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성과와 과제』 (No. 2012-16)
-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No. 2012-15)
-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에비치·이성우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남북한관계』 (No. 2012-14)
- 장노순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 (No. 2012-13)
-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 연계』
(No. 2012-12)
- 윤태영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전략의 발전방향』 (No. 2012-11)
- 박영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황과 다자간 해양협력방안』
(No. 2012-10)
- 김장현 『한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No. 2012-09)
- 홍승묵 『UN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제안 12개조』 (No. 2012-08)
- 김진호 『중국 정치 구조와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지도자 그룹』
(No. 2012-07)
- 김상배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화: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No. 2012-06)
- 유호근 『식량안보와 한국: 과제와 전망』 (No. 2012-05)
-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No. 2012-04)
- 진행남·오병호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 방안』 (No. 2012-03)
- 정성장 『북한 김정은의 실제 영향력, 지도체제의 성격과
핵심 파워 엘리트』 (No. 2012-02)
- 장준영 『미얀마의 개혁개방: 원인과 전망』 (No. 2012-01)
- 임홍재 『중국의 부상: 베트남의 기회와 도전』 (2011년 12월)
- 신중호 『양안(兩岸)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2011년 12월)

- 진창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치변화와 한일관계』 (2011년 12월)
- 장철균 『스위스 중립의 성격과 한반도 중립논의』 (2011년 11월)
- 조성권 『에너지 안보와 오일샌드의 개발: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사례연구』 (2011년 11월)
- 김우상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호주 중심』 (2011년 11월)
- 박영정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의 진단과 전망』 (2011년 10월)
- 정상화 『2012년 위기론 진단과 한국의 대응』 (2011년 10월)
- 박재선 『미국의 유대인파워』 (2011년 10월)
- 마영삼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2011년 9월)
- 정기웅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 스포츠 외교: 방향성의 모색을 위한 제언』 (2011년 9월)
- 김동성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2011년 9월)
- 우준모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 (2011년 8월)
- 고선규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2011년 8월)
-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2011년 8월)
- 조태열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2011년 7월)
-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2011년 7월)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의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